

‘대선 조작’ vs ‘자위대 입국’ 여야 전선 확장

與 “정권 정통성 부정...강동원 출당조치를”

野 “황 총리 망국적 발언 박 대통령이 사과해야”

새정치, 강의원 당직 박탈

여야 원내 지도부가 15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면충돌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의 ‘자위대 입국 허용’ 발언을 강력 비판한데 이어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강동원 새정치연합 의원의 ‘대선 조작’ 발언을 맹비난했다.

새누리당 조 수석부대표는 이날 대정부질문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를 짓밟아 버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가진 대통령에 불복하는 일이 이 자리에서 있었다”며 지난 13일 새정치연합 강

동원 의원의 대선 조작 발언을 겨냥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만약 강 의원의 생각이, 망언이 새정치연합의 뜻이 아니라면 새정치연합은 강 의원을 즉각 출당시키는 것이 맞다”며 “즉각적인 출당 조치만이 강 의원의 망언과 새정치연합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을 향해서도 “대선 불법(발언)을 바라보는 새정치연합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박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강 의원과 새정치연합에 대해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기대한다”고 발언,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앞서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대정부질문의 사진행 발언에서 “부득이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사실상 공식화하는 정부 최고 관계자의 공식 발언으로, 반(反)역사적 반(反)민족적 망언이 국회에서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허용한다는 이 망국적 발언에 대해 책임 있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며 “황 총리 발언에 대한 박 대통령의 명백한 입장 표명과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자신의 전날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날 대정부 질의 답변을 통해 “우리 측

요청이나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의 (한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이견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반도 안보 및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군사활동은 우리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선 개표조작’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강동원 의원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직과 원내부대표직에서 사퇴시키기로 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강 의원 질의가 당의 입장과 무관하다”며 “당내에서는 강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상식적이지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공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호남 경쟁적 정당체제 구축해야”

호남미래포럼 정책세미나

호남 발전을 위한 정치적 과제로 ‘경쟁적 정당체제’가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이하 호남미래포럼)이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호남,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가진 추계정책세미나에서 지방군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호남 차별은 호남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 교수는 “단순히 호남의 지역구를 지키는 것뿐 아니라 호남 거주 유권자와 타지로 옮긴 호남 출신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가 대표되도록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정치적 특권 고수가 아니라 한국 정당정치의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며 “새로운 사회적 균열구조를 반영하는 경쟁적 정당체제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승용 전남대 사학과 교수도 “호남 정신, 호남정치를 상징하는 ‘윤리적 정당성’과 정의 진화적 도시정체성은 ‘힘에 의한 정치’ 현실에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혁신적인 의제설정자로서의 호남의 역할을 복원하고 강화한다면 균형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

다”며 “호남이 균형자 역할 수행을 위한 과제로서 정치적 다양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 교수는 “현재와 같이 하나의 정당이 정치과정을 독점하는 구조는 호남의 이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광주와 대구 등 1당 독점의 폐해가 큰 지역의 GRDP가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정치적 다양성이 존재하는 충청의 GRDP가 영남과 호남에 비해 높다는 사실로부터 무엇을 깨달아야 할 것이며, 아울러 가치의 공동체를 지향해 나가는 과제는 기존의 호남의 노선과 지향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어려운 과제는 아니다”며 “국내정치에 있어서도 다자주의의 채택과 도입이 호남의 현실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갑수 전 농림부장관, 김동신 전 국방부장관, 허신행 전 농림수산부장관,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장관, 김수삼 성균관대 석좌교수, 문병호 전 중앙일보 시사미디어대표, 김재철 전 전남부지사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호남미래포럼은 지난 2013년 12월 창립했으며 이용훈 전 대법원장 등 호남의 대표성 있는 각계인사 58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무성, 문재인 첫 추월

리얼미터, 대선 양자대결

김 46.1%·문 40.8% 지지

차기 대선주자 양자대결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앞서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15일 밝혔다.

리얼미터가 지난 12~1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차기 대선주자 지지 부분에서 김 대표가 46.1%, 문 대표가 40.8%를 각각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7월 조사 대비 김 대표는 8.4%포인트 상승하고 문 대표는 2.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리얼미터 자체 조사 양자 대결에서 김 대표가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리얼미터는 밝혔다. 김 대표는 다자대결 여론조사에서도 이번 주까지 14주째 1위를 지켰다.

리얼미터는 “부산·경남, 호남, 30대에서 문 대표의 지지층 이탈이 심화됐다”면서 “그동안 계속된 당내 비주류와의 갈등, 야권 신당 세력의 영향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 주와 비교해 0.5%포인트 올라 47.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 43.0%(1.3%포인트 상승), 새정치민주연합 27.7%(2.0%포인트 상승), 정의당 6.2%(0.1%포인트 하락) 등의 순이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대통령 워싱턴 한국전 참전비 참배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방문 첫 일정으로 워싱턴 한국전 참전 기념비 공원을 방문,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대통령 “한국, 미국의 절대적 신뢰 파트너”

‘한미 우호의 밤’ 만찬사

박근혜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한국은 미국이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며, 한·미 동맹은 미국 야대 재균형 정책을 핵심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 D.C. 멜론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한미 우호의 밤’ 행사에 참석해 만찬사를 통해 “한·미 양국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공동의 가치와 이상으로 강력하게 결속되어 있

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히 가난을 벗어난 나라를 넘어서서, 국가 발전을 영인하는 세계의 많은 개도국에 영감과 비전을 제공하는 성공적인 모델을 자리를 잡았다”면서 “이러한 우리의 발전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참전용사와 평화봉사단, 주한미군, 그리고 재미동포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사의를 표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그린벨트시의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했다.

박 대통령의 나사 우주센터 방문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두 번째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5년 케네디 우주센터를 방문한 이후 50년 만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말 또는 내달 초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노동개혁·재벌개혁 ‘강대 강’

국회 대정부 질문 3일째

국회의 15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을 놓고 여야가 맞섰다.

여당 의원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노동개혁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노동계에 전가해선 안 된다며 재벌개혁을 포함한 포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기업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라며 “생산성은 낮고 임금은 비싼 고비용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노동개혁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주 의원은 임금피크제와 관련, “경제성장기 둔화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임금피크제는 회사의 비용절감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성

장 동력 확보와 법인세 정상화 등으로 재정을 확충해 청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신정훈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농촌경제의 몰락이 정부의 FTA 피해규모 축소로부터 비롯된 잘못된 피해보전 대책 때문이라고 주장해 주목을 끌었다. 신 의원은 이날 공개한 대외경제연구원 ‘한·칠레 FT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FTA발효 전의 사전영향평가의 농업분야 피해 예측액은 2004년 발효 후 10년간 5860억원이었지만 같은 기간 실제 관측된 피해액은 1조 26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커졌다.

또 한중FTA 피해 예측과 관련해서도 산업부가 국회 비준동의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영향평가에서 농업분야의 피해가 농식품부(2013년)의 보고서의 1조 4000억보다 9배나 축소된 1540억 원에 불과했다.

신 의원은 “농어촌 몰락을 초래한 FTA개방능력의 총체적 실패에 대해 진지한 자기반성과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담보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감평가 대비 70% 가능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최대 2,000만원 가능

임대보증금 대출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크키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